

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안드로이드



아이폰



보도시점: 2025. 9. 22.(월) 08:30 배포: 2025. 9. 22.(월) 08:30

"내 아이가 위급한데 수술 동의도 못해요..." 위탁부모 현실에 10명 중 8명 '불합리' 응답

- 국민권익위, '가정위탁제도' 관련 3,476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
- 10명 중 7명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... 대대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시급
-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

□ 부모의 사망·학대·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준 위탁가정,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며 법적 권한이 없는 '동거인' 신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'국민생각함'*을 통해 3,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, 위탁 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.3%가 '매우 불합리'하거나 '불합리'하다고 답했다.

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,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.

*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(<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>)

□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큰 문제는 '가정위탁제도'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. 전체 응답자의 71.6%가 가정위탁제도에

대해 ‘처음 들어봤다.’ 혹은 ‘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.’라고 답해,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. 현재 지원금은 월 30~50만 원 수준이지만, 응답자의 과반수(61.1%)는 ‘월 70만 원 이상’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. 특히,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.3%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.

-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(중복응답)에는 ‘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’(37.1%)가 첫 번째로 꼽혔다. 그 뒤를 이어 ‘의료 동의,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’(29.5%), ‘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’(17.0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,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. 응답자의 78.8%가 위탁가정을 위한 ‘경제적 후원’에, 86.4%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‘재능기부 참여’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.
-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“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약 3,500명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,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	책임자	팀 장	윤효석 (044-200-7209)
		담당자	조사관	이정원 (044-200-7108)

1. 조사 개요

- ◆ 설문제목 : ‘가정위탁’ 제도,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한 아이를 지키는 일, 직접 키우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
- ◆ 설문기간 : '25.8.25.~9.7.(2주간)
- ◆ 설문방식 :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
- ◆ 설문내용 :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공감대 등 **8개 문항**
- ◆ 설문참여 : 총 **3,476명**(일반국민 1,473명, 국민패널* 2,003명)
*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,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

2. 설문 응답결과[객관식 및 주관식 병행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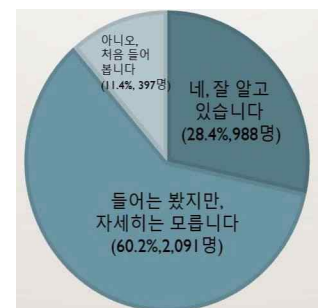
<응답자 정보>

- (총인원) 3,476명
- (성 별) 남성 2,059명(59.2%) / 여성 1,417명(40.8%)
- (연령대) 10대 이하 4명(0.1%) / 20대 236명(6.8%) / 30대 886명(25.5%) / 40대 1,087명(31.3%) / 50대 712명(20.5%) / 60대 442명(12.7%) / 70대 이상 109명(3.1%)

가. ‘가정위탁’ 제도에 대한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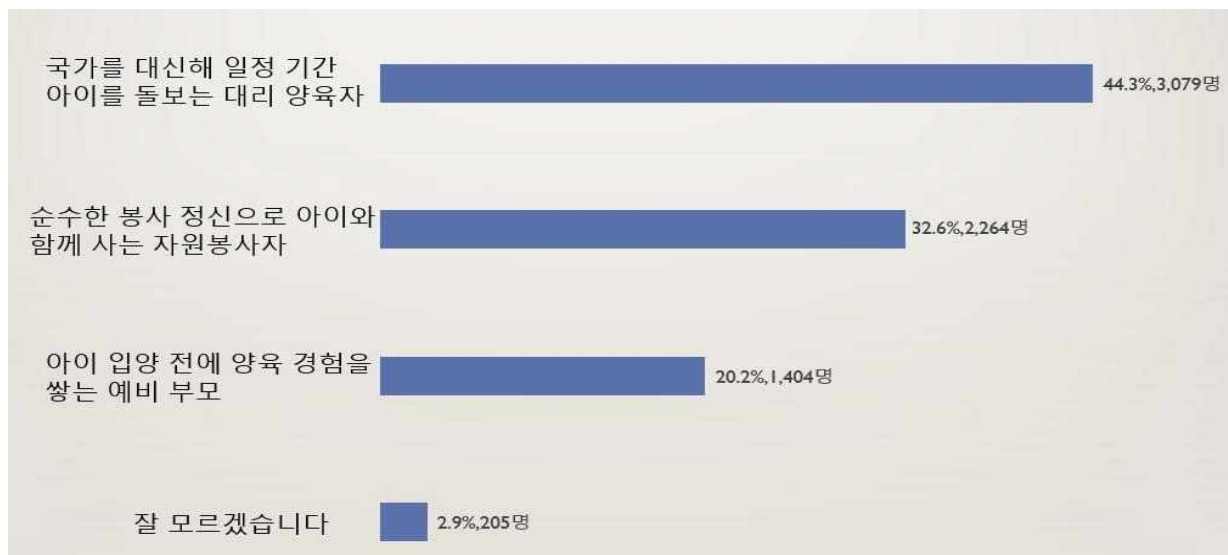
1) ‘가정위탁’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

- 총 3,476명의 응답자 중 **71.6%(2,488명)**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거나,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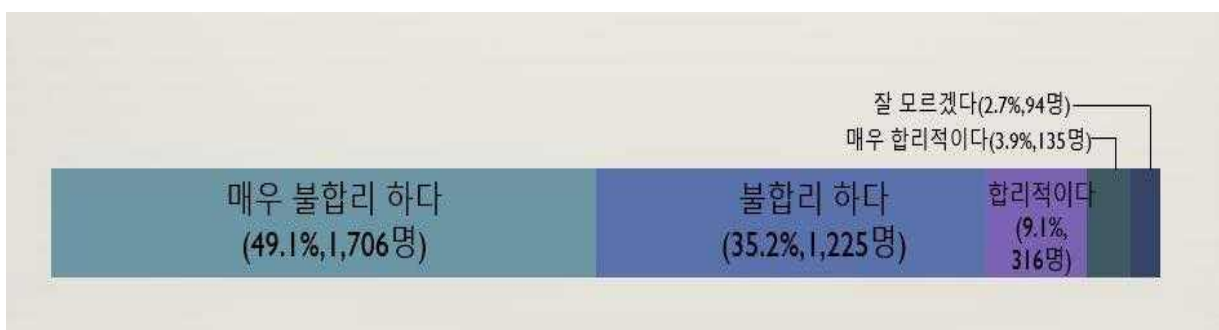
2) '위탁부모'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(2개 중복응답)

- 가장 많은 응답자(44.3%,3,079명)가 '국가를 대신해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는 대리 양육자'라고 답변
- 다음으로 '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아이와 함께 사는 자원봉사자'(32.6%,2,264명), '아이 입양 전에 양육 경험을 쌓는 예비 부모'(20.2%,1,404명)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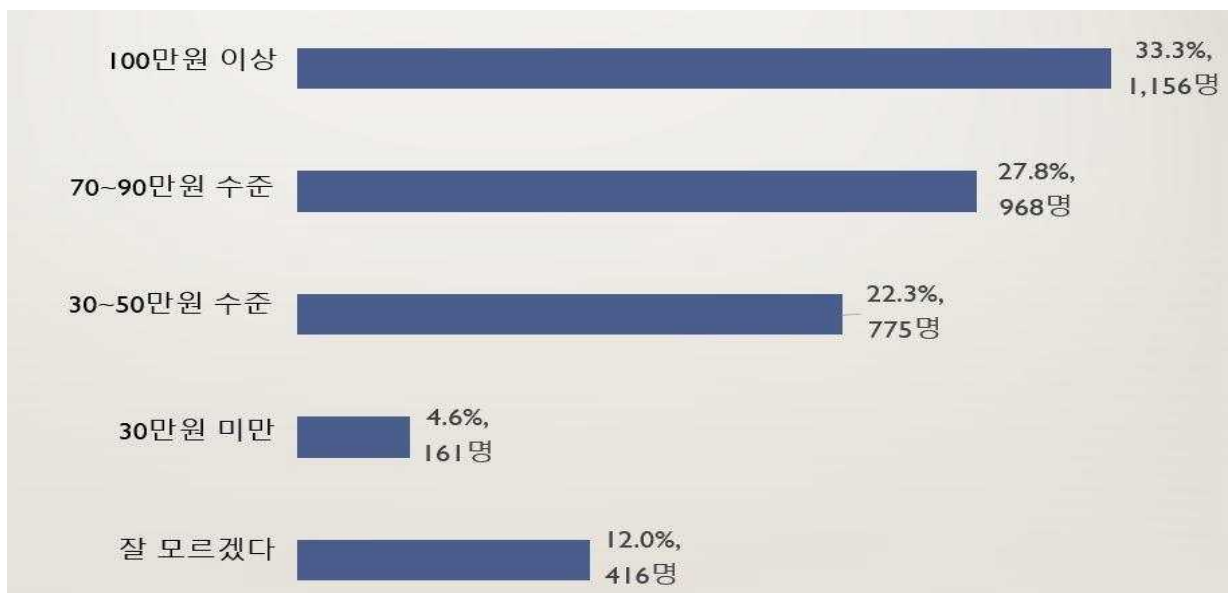
3)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부재로 인해 위탁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

- 위탁가정의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, 위탁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는 '동거인'이라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에,
- 응답자의 84.3%(2,931명)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변



4) '월 양육보조금' 수준에 대한 인식

- 가장 많은 응답자(33.3%,1,156명)가 '100만원 이상'이라고 답변,
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(27.8%,968명)가 '70~90만원 수준'이라고 답변
- 과반수 응답자(61.1%)가 국가가 현행 지원수준(30~50만원 수준)
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



5) '월 양육보조금' 이 지자체별로 다른 현실에 대한 생각

- '매우 불합리하다' 또는 '불합리하다'라고 답변한 응답자가
73.3%(2,549명)에 달함



나. 우리가 만드는 변화: 함께하는 방법 찾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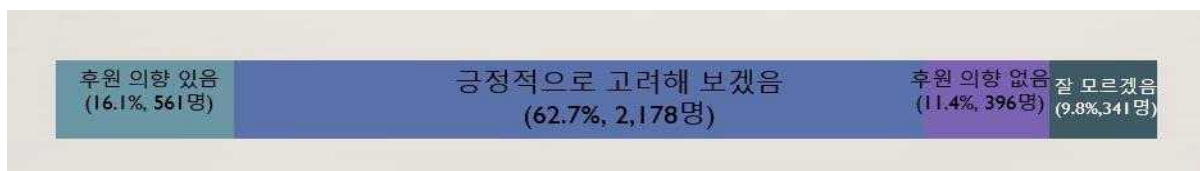
6)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(2개 중복응답)

- 가장 많은 응답자(37.1%, 2,580명)가 ① (경제적 지원 현실화) 지역 격차 없이 양육비를 현실화하고, 국가가 책임을 강화라고 답변
- 다음으로 ② (법적 권한 부여) 위탁부모에게 의료 동의, 통장 개설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(29.5%, 2,051명), ③ (국민 인식 개선)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 전개(17.0%, 1,183명) 순으로 응답



7) 위탁가정 경제적 후원 의향

- 응답자의 78.8%(2,739명)가 경제적 후원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
- 62.7%(2,178명)가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응답, 16.1%(561명)가 후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



8) ‘전문지식이나 기술’을 활용해 위탁가정을 돕는 ‘재능기부’ 참여 의향

- 응답자의 86.4%(3,005명)가 재능기부 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
- 53.9%(1,872명)가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응답, 32.6%(1,133명)가
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

